

이덕일의 ‘역사의 창’



공천과 파천 사이

요즘 공천(公薦)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당에서 천거하는 것이므로 당천(黨薦)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해 보이는데 왜 공천이라고 할까? 공천(公薦)은 우리 선조들이 사용하는 용어였다.

이조(吏曹)와 병조(兵曹) 등에서 관직 후보자를 임금에게 추천하는 것이 공천이었다. 문관에 대한 공천권은 이조, 무관에 대한 공천권은 병조에 있었는데, 이·병조를 전조(銓曹)라고 했다. 전(銓)이란 저울이란 뜻이니 ‘저울질 하는 관아’라는 뜻이다.

벼슬자리가 비면 이조와 병조에서 세 명의 후보자를 천거했는데, 이를 주의(注擬: 천거), 또는 세 사람을 추천한다고 해서 삼망(三望)이라고 했다. 삼망에 드는 것을 물망(物望)에 올랐다고 했다. 현재의 선거제도는 유권자가 특정 후보의 이름 밑에 의사를 표시하지만 조선에서는 임금이 특정한 이름 위에 점을 찍었다. 이것이 낙점(落點)이었다.

조선의 정쟁은 결국 자라다툼이기도 했는데,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마련한 장치가 탕평책이었다. 탕평책의 핵심은 예나 지금이나 인사 정책이다. 지금은 인

사권자가 적당하게 지역 안배를 하는 것을 탕평책이라고 부르지만 조선의 탕평책은 제도적으로 보장된 인사장치였다.

영조는 재위 후반에는 스스로 탕평책을 붕괴시키지만 초반에는 호대쌍거(互對雙擧)라는 탕평책을 마련했다. 이는 3명을 천거할 때 각 당파를 골고루 포함시키고 한 부서 안에도 각 당파를 고루 포진시키는 인사방식이었다. 판서가 노론이면, 참판은 소론을 등용하는 식의 인사방식이었다.

뿐만 아니라 세 명 중 한 명은 1위 후보자인 일망(一望)으로 올리고, 한 명은 과거 물망에 올랐던 인물을 올리고, 또 한 명은 처음 후보자 명단에 올리는 신통(新通)이어야 했다. 이런 방식으로 한 당이 관직을 독점해서 일당독재로 가는 것을 방지했다. 뿐만 아니라 관직 경력자의 경험을 중시해 안정성을 유지하는 한편 신진인사의 진출도 보장해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런데 영조 48년(1772) 이런 인사 원칙을 뒤엎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른바 노론 정명당(淸名黨) 사건이었다. 성균관 대사성 자리가 비자 공천권자인 이조판

서 정존겸(鄭存謙)과 이조참의 이명식(李明植)이 세 명을 공천했는데 세 명이 모두 노론 청명당 소속이어서 물의가 일었다.

청명당이라고 해서 깨끗한 사람들이 모인 당이라는 뜻이 아니라 노론 중에서 다른 당파와 공존을 거부하는 강경 보수파들이 자신들을 그렇게 자찬한 것이었다. 대사성 후보에 오른 세 사람이 모두 노론 청명당 소속인 데다가 세 명 중 한 명만 1위 후보자인 일망(一望)으로 올려야 하는데 셋 다 일망이었다. 또한 세 사람 모두 처음 천거하는 신통(新通)이었다.

이는 한 당의 독재를 방지하고, 정국의 안정을 꾀하면서도 신진인사들의 벼슬길 진출을 보장했던 탕평의 인사시스템을 파괴한 것이었다. 또한 세 명 중에 한 명을 낙점(落點)하는 임금의 인사권에 대한 부정이었다.

지금으로 치면 특정 지역구의 국회의원 후보자 전원이 한 당 소속인 셈이었다. 공천이라기보다는 당천(黨薦)이자 특정 계파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파천(派薦)이었다. 영조는 파천을 실행한 정존겸

을 회양(淮陽), 이명식을 장연(長淵), 그리고 청명당 당수로서 이 인사를 배후에서 조종한 전 영사 김지인(金致仁)을 해남(海南)으로 유배 보내서 청명당을 붕괴시켰다.

지금 공천 문제를 둘러싸고 당 내부가 내용에 쌓이기도 하고, 심지어 야당의 경우 이 문제 때문에 돌로 갈라졌다. 특정 계파의 사람들을 공천하려는 파천(派薦)에 대한 불만이 여야 모두의 갈등의 근본 요인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빠진 것이 있다. ‘후한서’(後漢書)〈예형열전〉에는 후한(後漢)의 공용(孔融)이 예형을 추천하면서 “사나운 새 수백 마리가 독수리 한 마리만 못하니 예형을 조정에 세우면 반드시 불 만할 것입니다”라면서 천거했다. 자파 사람들 사이에서 인재로 여기는 사나운 새보다는 국민들이 볼 때 독수리 같은 인재를 천거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독수리 같은 인재들이 어느 당에 더 많이 모이든지 유권자들은 주목하고 있다. 이런 인재들을 많이 공천하는 정당에 표를 주고 싶은 것이 국민의 마음인 것은 당연하다.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

의료칼럼

반갑지 않은 봄 손님



김재봉 밝은눈 밝은광주인과 대표원장

도 했다.

황사는 이렇게 무려 1800년 전부터 우리와 함께 했지만 여전히 환대받지 못한 존재다. 중국과 몽골의 사막지대와 황하 종류의 황토지대에서 날아오는 황사는 3~5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모래와 먼지가 하늘로 올라 퍼져 있다가 편서풍을 타고 날아오는 황사는 호흡기 질환은 물론 눈 질환, 알레르기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하게 된다.

특히 가장 심하게 영향을 받는 부위는 눈이다. 바람을 타고 눈에 직접 들어오는 이물질은 각막과 결막의 표면을 덮고 있는 세포막에 붙어 손상을 주게 된다. 또 손상된 막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각막염이나 결막염 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이제는 너무 흔한 질환인 안구건조증은 이 시기에 더욱 심해지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안구건조증 월별 진료인원 현황’에 따르면 2009년 3월(24만2765명)에 비해 5년 후인

2013년 3월(30만2585명)의 안구건조증 환자가 11.1% 증가했다. 다른 달에 비해 3월에 유독 안구건조증 환자가 많은 이유는 황사 탓일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황사는 알레르기성 결막염도 유발한다. 황사는 물론 꽃가루와 미세먼지 등의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 눈꺼풀과 결막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에 걸리면 극심한 가려움과 시린 증상이 나타나며 이물감과 함께 충혈이 된다. 심해지면 결막이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곧바로 치료하지 않으면 각막 파열 등으로 악화하기 때문에 즉시 가까운 안과에 가야한다.

불철 안질환은 개인 위생 관리를 잘하고 눈 관리에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대부분 예방이 가능하다. 항상 손과 눈을 깨끗이 하고,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다. 눈에 이물감이 느껴지거나 가렵다고 해서 눈을 비비거나 소금물로 씻어내는 행동은 각막에 상처를 낼 수 있으므로 절대 금물이다.

또한 외출 시에는 선글라스 등 보안경을 착용하고 눈에 흙먼지가 들어가면 비비지 않도록 하고, 인공눈물 등으로 씻어 주는 것이 좋다.

또한 하루 10잔 안팎의 충분한 수분 섭취는 몸에 들어온 중금속과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고, 건조해지기 쉬운 피부에 활력을 준다. 과일과 채소는 항산화작용을 하고, 비타민 A, C, E 등이 면역력을 높여주므로 황사예방에 적격이다.

반대로 길거리에서 조리하는 음식과 밀봉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과일·채소에는 황사에 의한 오염이 심하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콘택트렌즈 착용자는 가급적 안경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부득이 착용해야 할 경우에 일회용 렌즈를 사용해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좋다. 라식, 라섹, 백내장 등의 수술을 받은 사람은 눈이 더욱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황사철 눈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기 고

2017년 ‘May Festival’ 환상곡



김종률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

합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문화가 밝아 되는 그런 광주를 만들고 있다.

5월17일부터 27일까지는 5·18을 기념하는 행사가 17일 전야제를 필두로 10일간 화려하게 펼쳐진다. 이제 5·18 전야제와 기념행사는 1회성의 이벤트를 지양하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시민들의 축제로 펼쳐진다. 이 행사는 금남로와 민주광장을 중심으로 두고 4~5곳의 주요 거점들을 흰옷 검은옷 입은 시민들이 큰 원을 그리며 햇볕과 촛불을 들고 행진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다음 날 아침까지 계속된다. 또한 광주정신은 전 세계에 알리는 락(Rock)음악 중심의 월드뮤직페스티벌이 금남로를 진동하여 1980년의 합성소리를 음악소리로 재현할 것이며 민중미술 전시회도 계획되어 있다.

5월28일부터 31일까지 4일 동안 광주 시민의 날로 명명하여 ‘MayFestival’에 참여한 모든 외국관광객을 위한 특별한 감사의 행사가 펼쳐질 것이다. 마지막 31일 밤에는 ‘MayFestival’의 대미를 장식하는 대규모 뮤지컬이 민주광장 분수대 위의 특설 무대에서 펼쳐진다. 5만 명에

이르는 관객객들의 심장소리가 특설무대를 가득 채울 것이다.

시장님의 마지막 인사말이 다시 귓가에 맴돈다. “시민여러분, 우리는 해냈습니다! 지난 6개월동안 광주시 50만 가구들에게 5월 한 달 동안 단 하루만이라도 가족과 함께 민주광장에 나오셔서 축제도 참여하시고 식사도 하시라는 간곡한 호소를 시민여러분들은 실천해 주셨습니다. 이제 광주는 축제로도 광주정신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MayFestival의 첫 해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우리는 MayFestival을 다듬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MayFestival을 통해 전 세계에 광주정신을 알리고 전 세계인들이 찾아오고 싶은 광주를 만듭시다. 위대한 광주시민 만세 만세 마~안세.”

1년 후를 미리 상상해 본 2017년 5월 ‘MayFestival’의 이야기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벅차오른다. 하지만 상상으로 그치면 안될 일이다. 광주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부터 열심히 준비해야겠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옥석 가리는 컷오프 전략적 이용은 곤란하다

4·13 총선을 30여 일 앞두고 바야흐로 시작된 여야의 ‘컷오프’가 조미의 관심사다. 선거를 치르는 정당은 물론이고 유권자들도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국민당은 과거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임내현 의원을 어제 공천에서 제외시켰다. 이는 현역의 원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단지 ‘즐거운 유머’를 들려주었을 뿐 성희롱은 아니었다는 임 의원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당이 국회의원으로서 적절할 일 없었다는 임 의원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당이 국회의원으로서는 적절치 못한 언행으로 판단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1차 하위 20% 현역 컷오프에 이어 3선 이상 중진 50%와 초·재선 30%를 대상으로 한 2차 컷오프 발표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일부 지역에 대한 경선 후보 발표 형식으로 대상자를 배라하는 것이다. 이날 경선 후보에 포함되지 않은 의원들의 경우 ‘잠재적 탈락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일단 경선 대상에 들어가지 못한 광주·전남 초·재선 현역 3명도 조건장 상태라고 한다.

동시에 더민주가 공개한 경선 후보에는 물의를 빚은 현역도 들어있다. ‘제작 발언’으로 윤리심판일 징계를 받은 김경협 의원. 한밤중에 술취해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호통친 유대은 의원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는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출근 강조해 온 패권주의 청산과 운동권 문화 극복 원칙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친노 패권 행태에 앞장선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것은 김 대표의 청산 공언과 맞닿아 맞지 않다”고 비판한 국민의당 입을 벌이지 않더라도 유권자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의 공천 결과가 야권 통합이나 연대 논의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주목되는 점을 감안하면 애초부터 진정성이 있었느냐는 의구심도 감출 수 없다. 각 정당이 옥석 가리기에 들어갔지만 컷오프를 전략적으로 이용해서는 곤란하다. 특정한이나 자기 계파 챙기기로 흐를 경우 역풍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막말 퍼부는 윤상현 의원 스스로 책임져야

새누리당의 친박계 ‘현역 의원 살생부’ 논란이 ‘김무성 대표 공천 배제’ 기획 파문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현역 의원 물갈이’ 태풍이 임박한 와중에 친박계의 핵심인 윤상현 의원이 김무성 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계파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윤 의원은 지난달 지인과의 전화통화에서 “김무성이 죽여 버리게. 죽여 버려 이 XX.” “그런 XX부터 속아 내 공천에서 떨어뜨려 버려라 한 거야”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녹취를 통해 언론에 보도됐다. 어떻게 당 대표를 겨냥해 욕설과 폭언, 심지어 공천 탈락 운운까지 할 수 있는지 놀라울 뿐이다. 아무리 청와대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친박계 실세라지만 어찌 그리 오만할 수 있는지 개탄스럽다.

윤 의원의 발언 시점은 김 대표가 새

누리당 현역 40여 명에 대한 ‘공천 살생부’를 친박계 핵심 인사로부터 전달받고, 이를 정두언 의원 등 일부 비주류 의원에게 전했다는 정 의원의 주장이 보도된 직후라는 점에서 미묘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친박계가 김 대표의 의박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현역 물갈이 컷오프’를 기획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논란이 번지자 윤 의원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취중에 흥분한 상태에서 억울함을 토로하던 중 실언한 것 같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이번 윤 의원의 막말은 정치인의 자질 문제, 집권 세력의 도덕성, 그리고 진흥당 싸움이 된 여당의 공천 갈등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이번 막말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을 날날이 밝혀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통화 상대가 누구인지, 통화 내용의 일부라도 실행에 옮겨졌는지 규명해야 할 것이다. 윤 의원 스스로도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無 等 鼓

학자들은 양심과 소신에 따른 연구나 주장 때문에 알못게도 종종 법의 심판대에 선다. 역사학자 이덕일 씨도 최근 유죄판결을 받았다. 저서 ‘우리 안의 식민사관’(만권당)에서 ‘김 도 명예교수가 일본서기를 사실로 믿고 일나 일본부설(任那日本府設)을 지지했다’고 비판한 것이 발단이 됐다.

임나일본부설은 ‘한반도 남부에 임나라는 이름의 일본 식민지가 있었다’는 식민사관이다. 김 교수가 이 씨를 명예훈장으로 고발했고 법원은 이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식

법대로 사회

이른 ‘어이 정 선생은 “학문을 법으로 재판하면 안 된다”고 성명을 내는 등 역사학계가 반발하고 있다. 박유하 세종대 교수도 지난 2013년 펴낸 ‘제국의 위안부’(뿌리도피리)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의 사회·역사적 성격을 논쟁한 이 책은 2015년 제2판이 나왔으나, 모두 368쪽 가운데 34쪽이 삭제됐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박 교수가 피해자들을 매춘 행위자나 일본군의 협력자로 매도하고 있다”며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 법원이 수정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아

쉽게도 제2판에서는 법원이 문제 삼은 구절을 수정한 것이 아니라 “○○○○이다” 등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도무지 저자의 주장을 알 수 없게 돼 있다.

최근 인터넷 한양대 정민 교수도 적잖은 내상을 입은 것 같았다. 대부분 아는 사실이지만 정약용 선생은 강진 유배시절 접을 뒀다. 정 교수가 쓴 ‘살을 바꾼 만남’(문학동네) 등 저술에 등장하는 사실이다. 중풍으로 고생하던 처지에서 수발을 들어주던 이와 인연

을 맺은 것이다. 정 교수의 연구 결과는 다산을 존경하는 분들의 원성을 샀다. 어떤

이는 “어이 정 선생은 “학문을 법으로 재판하면 안 된다”고 성명을 내는 등 역사학계가 반발하고 있다. 박유하 세종대 교수도 지난 2013년 펴낸 ‘제국의 위안부’(뿌리도피리)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의 사회·역사적 성격을 논쟁한 이 책은 2015년 제2판이 나왔으나, 모두 368쪽 가운데 34쪽이 삭제됐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박 교수가 피해자들을 매춘 행위자나 일본군의 협력자로 매도하고 있다”며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 법원이 수정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아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에서 학자들이 인격적인 권치를 당하거나 법정에서는 것은 두고두고 아쉽다. 학문의 법의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법으로 단죄하거나 사적인 감정으로 처리하면 지적인 토론회나 비판, 논쟁의 여지는 사라지고 재판 결과만 남는다. 학문의, 학자들이 법의 눈치를 봐야 하는 사회는 아만이다. /윤영기 문화미디어 부장 penfoot@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대표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